
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14:00시부터 보도 가능</h2>	
---	--	-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,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 · 코스닥시장본부, 한국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		
책 임 자	[금융위원회] 선 욱 과장 [금융감독원] 오영석 실장 [한국거래소] (유 가) 안상환 본부장보 (코스닥) 서종남 본부장보 [한국상장회사협의회] 이승렬 회원지원본부장 [코스닥협회] 김종선 연구정책본부장	담 당 자	[금융위원회] 이동욱 사무관 (02-2156-9912) [금융감독원] 서규영 부국장·팀장 (02-3145-8450) [한국거래소] (유 가) 채현주 부장 (02-3774-8739) (코스닥) 김용상 부장 (02-3774-9800) [한국상장회사협의회] 류광춘 기업법제팀장 (02-2087-7150) [코스닥협회] 김 구 법제팀장 (02-368-4530)
배 포 일	'15. 6. 1(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10매

제 목 :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, 정확하고 적시성있는 정보제공을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

1. 추진 배경

- ☐ 금융위원회(위원장 임종룡)는 지난 「기업공시제도 간담회」 (5.19)를 통해 제기된 **현장의 어려움***을 해소하기 위해,
 - * 주로 공시제도의 복잡성, 공시정보의 자율성 · 신뢰성 등의 문제 제기
-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, 한국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공시제도 전반을 점검
- ☐ 이를 통해, **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보완하고, 기업공시가 신뢰성 있는 정보교류로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**
 - 공시제도의 효율성 · 자율성 · 책임성 측면에서 규제선진화 전면 추진

2. 주요 내용

가 효율성 제고방안

- ①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생산 비용 감축
- ② 금감원-거래소간 중복공시 완전 통·폐합
- ③ 불필요한 공시의무 부담 완화 및 기업규모에 따른 공시합리화

1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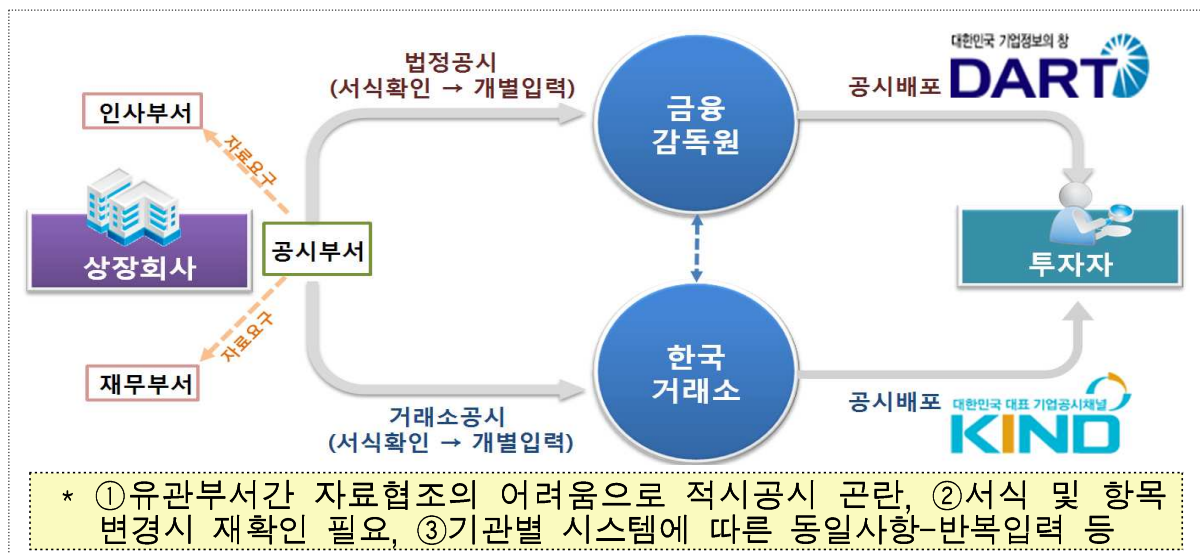
현 “(A회사 공시담당자) 공시담당자가 회사에 산재된 모든 공시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됩니다”
 “(B회사 공시담당자) 공시관련 규정·서식 등이 빈번히 개정되어 실무자가 모든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 공시정보가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”

○ 그간 공시제도의 복잡성과 기업들의 과도한 작성부담 등으로 적시성 있는 공시대응에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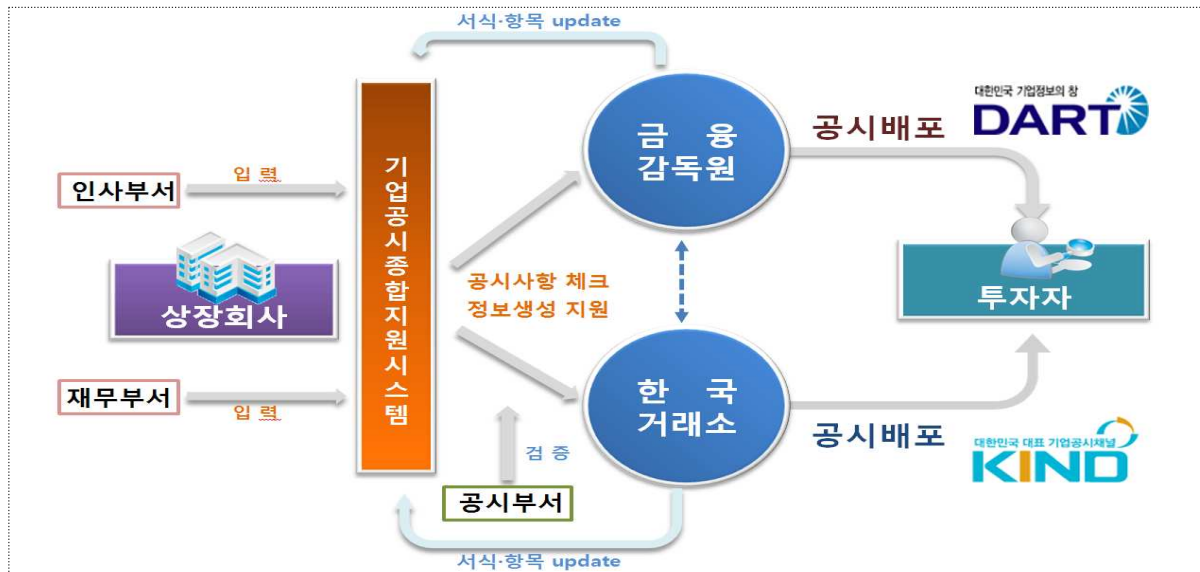
▶ 거래소-금감원-상장협 협업으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공시정보 생산비용 감축

☞ 기간 : '15.6월 ~ '15.12월 (1단계 오픈, 2단계 고도화 : '16.3월)

<(현행) 기업공시 작성 절차>



<(변경)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구축 >



- * ①시스템을 통해 공시항목 여부 자동체크, ②서식 등 변경시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정보 유지, ③입력자료의 공시정보 생성 지원

※ 동 시스템은 기업여건 등에 따라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달리 할 수 있음

《기대효과》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·전달까지 One-Stop 지원

단계	현행	개선
1단계 (준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시부서가 개별부서 자료 요청 후, 취합된 자료를 개별 공시입력 · 공시담당자가 해당 정보가 공시항목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⇒ 개별부서에서 공시자료 직접 입력 * 공시부서는 입력자료 검증 및 확인 ⇒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공시항목인지 여부를 자동 체크
2단계 (확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시항목·서식 변경시, 공시담당자가 변경내용 개별 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⇒ 변경된 서식이 시스템에 자동 update 되어 최신정보 유지
3단계 (입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취합된 정보를 DART·KIND 시스템에 담당자가 개별입력 · 특히, 동일정보(기본값)의 반복 입력으로 불필요한 작성부담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⇒ 입력자료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시정보로 생성되어 DART·KIND에 전송 ⇒ 동일정보(기본값)는 1회만 입력하면 되도록 하여 중복작성 부담 경감

▣ 기업공시 정보생산 비용의 획기적 감축 및 필요한 투자정보의 적시성 있는 공시 유도

2 중복공시 완전 통폐합

현 “(C회사 공시담당자) 유사한 공시내용을 기관별로 서로 다른 서식에 따라 중복작성하려다 보니 불필요한 투입이 발생합니다”

- 우선, 금감원·거래소간 공시서식 전수조사 후, 동일사유일 경우 동일서식으로 완전 통폐합

※ 현재까지 「주요사항보고서(금융위공시) - 수시공시(거래소공시)」 간 조사결과, 유사한 공시항목은 13개 항목

⇒ 이중,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단일화 既완료('09.2)

남은 2개 항목* 단일화를 통해 완전 통폐합 (거래소 서식기준 약 10개)

* 자산·영업양수도 발생 공시, 합병·분할 등 발생 공시

☞ 기업공시서식 개정 (3분기)

- 향후, 다른 공시사항 등도 비교·검토하여 공시항목이 유사하고 서식통합이 가능할 경우 협업을 통해 통폐합 노력

《기대효과》 불필요한 중복작성 부담을 해소하여 기업공시의 효율성 제고

3 기업측 공시부담 완화

현 “(D회사 공시담당자) 불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부담을 완화해주길 바랍니다. 특히, 자회사 또는 종속회사에 대한 공시부담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”

①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적 공시항목* 삭제

* (i)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, (ii)일정규모 이하(예 : 자산 10% 미만) 영업전부 양수(이상 주요사항보고서) (iii)감사 중도퇴임, (iv)주요 종속회사 편입·탈퇴 (이상 수시보고) 등 별도공시 필요성이 낮은 사항을 의무공시 항목에서 제외

② 자율공시가 가능한 항목*은 자율공시로 이관

* (i)생산재개, (ii)기술도입·이전(코스닥) 등 기업 스스로 정보공개가 유리한 사항은 자율공시로 이관

③ 기업규모별 공시수준 차등화를 통한 소규모 기업 부담 완화

- * 기업규모별 공시수준 차등화 기준을 확대(자산 1천억→2천억원)하고, 소규모 기업(1천억원 미만)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기재항목도 일부 완화 등 추진

④ 지주회사 자회사 및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의무 부담 완화

- * 지주회사(지배회사) 경영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자회사(종속회사)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, 그간 금감원-거래소간 불일치한 '주요 종속회사' 기준 통일

⑤ 기타 공시책임자 자격요건 완화(등기이사 → 업무집행지사자, 코스닥) 등 추진

☞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및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(3분기)

《기대효과》 기업공시 작성부담 연간 약 2,300건 축소 기대
(‘14년도 기업공시 실적 대비 약 △6.7%)

나 자율성 제고방안

- 1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측 변론권 강화
- 2 공시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 개선
- 3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 도입

1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도입

☞ “(E유관기관 담당자) 잘못된 품문 등 기업의 해명이 필요한 사항 발생시, 거래소가 일일이 조회공시하여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들도 공식적 해명채널이 없어 적극적 해명기회를 확보하길 희망합니다”

<사 례>

- ① OO언론(‘13.7월)에서 A회사가 중간배당을 전년 대비 5~10배 정도 확대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 → A회사 주가 및 거래량 등에 영향 발생
- ② 해당 보도는 중간배당 결정이 아닌 언론의 추정에 불과하여 조회공시 대상이 아니었으므로, A회사에서 보도자료를 이용해 제한적 범위에서 해명

○ ‘거래소 조회요구 없이도’ 잘못된 보도·품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 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하는 기회 제공 (자율적 해명공시)

- * 미국·영국·싱가폴 등도 상장법인에게 자발적 해명기회 부여

○ 단, 허위의 해명공시에 대해서는 거래소 확인후 제재 등 엄중대응

☞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(3분기)

《기대효과》 ‘기업공시’라는 공식적 채널을 통한 자율적 해명 기회 부여를 통해 기업의 공시 자율성 및 능동성 제고

2 공시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 개선

現 “(F유관기관 담당자) 기업공시 사전확인제도로 인해 필요한 투자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고, 기업들의 자율성 제고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”

-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 폐지하여 과도한 감독자(supervisor) 역할은 제한하되, 기업측 자문(consulting) 기능은 유지

* 현재 공시우수법인·우량법인 등에 대해서만 사전확인을 예외적 면제(원칙적 적용)

- 다만, 신규상장법인, 불성실공시법인, 매매거래 정지 필요항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절차 유지
- 또한, 기업이 거래소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

- 시장간 규모·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우선 적용한 후, 코스닥 시장으로 단계적 확대

☞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(3분기)

《기대효과》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공시 제고 기대

3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 도입

現 “(G증권 애널리스트) 수요자 입장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세세한 규정보다는 업종별·항목별 탄력적 정보제공이 가능한 공시체제가 필요합니다”

- 현행 거래소 수시공시는 열거주의(54개 항목)를 채택하여 상장법인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 발생

<열거주의 공시체계의 주요 문제점>

- ① 공시여부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제도를 통해 획일적 판단 → 자율성 문제
- ②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정보임에도 불구하고,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공시 누락* 문제 → 정보 불충분
 - * 예 : H사 본사부지 매입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적시공시에 어려움
- ③ 열거된 공시항목을 규제로 인식 → 규제 회피

▶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

- 다만, 일시적 제도변경시 시장혼란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단계적 도입 추진

<포괄주의 공시체계 단계적 도입방안>

① (1단계)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도입 ('15년말,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)

- 수시항목 ①~⑤4 외에 “기타 상장법인·재무·주식에 ‘중요한 영향’을 미치는 사항” (조항신설) → 중요정보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

② (2단계) 공시항목의 포괄·단순화 ('16년)

- 공시항목별 유용성 분석을 통해 공시항목 단순화 (유형별 카테고리 분류)

구 분	현 행	개 선
손익	①재해 발생(자산 5%) ②벌금부과(자기 자본 5%) ③파생손실(자기자본 5%) ④매출채권이외 손상차손(자기자본 5%)	중요손해 발생(자기자본 5%) (손해발생 사유 기재)
발행 증권	①유·무상 증자 및 감자결정 ②이익 소각 결정 ③주식분할 또는 병합결정	발행주식 수 증감 (증감사유 기재)

③ (3단계) 1·2단계 정착후, 완전 포괄주의 이행 추진 ('18년 이후)

《기대효과》 시장환경 및 정보 중요성 변화 등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충분한 정보의 적시성 있는 제공 기대

다

책임성 제고방안

- 1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항목 보완
- 2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책임성 강화
- 3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

現 “(H증권 애널리스트)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, 불리한 정보도 올바르게 공시되어야 합니다”
“(I유관기관 담당자) 기업공시의 자율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”

1 투자자보호 공시항목 보완

○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*은 공시 강화

- * ①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증선위 임원해임 권고 조치도 공시 포함
- ② 주권관련 사채(CB,BW) 일정규모 이상 취득시, 타법인주식 취득에 준하여 공시
- ③ 최대주주 지위변경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주식담보 제공 행위 공시
- ④ 국내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외환규제 발생시 해당 사실 공시

2 공시책임자의 책임성 강화

○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등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 도입

○ 기업별 공시책임자(특히 임원)에 대한 공시교육 강화

* (현행) 공시책임자 지정후 2년내 4시간 → (변경) 지정후 6개월내 교육 이수

3 허위공시 등 제재 실효성 제고

① 위반 경중에 따라 공표기간, 문구* 등을 차등화하여 시장평판 활용

* 경미한 위반은 “공시규정 위반” ↔ 중대위반은 “불성실공시법인(중대위반)” 구분 표시

②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제출시, 6개월 후 이행보고서 제출 및 공표

③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상향(2배)하여 제재 실효성 확보

* (현행) 유가 1억원, 코스닥 5천만원 → (개선) 유가 2억원, 코스닥 1억원

《기대효과》 기업공시의 책임성 강화 및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

라

기업공시 활성화 지원

- ① 중소기업 IR 지원 강화
- ② 기업공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

現 “(J증권 애널리스트)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, 정작 필요한 정보는 불충분하므로 다양한 IR기회를 보장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공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”

① 중소기업 IR 지원 강화

- ① (IR 기회확대) 중소기업 IR 박람회,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합동 IR 개최 및 IR 홍보책자 발간 지원
 - 영문 IR 공시규제를 폐지*하여 외국 투자자 대상 IR 강화
- * (현행) 영문 자율공시 기한을 ‘익일’로 제한 → (변경) 기한 · 서식 폐지
- ② (IR 참여유도) 상장계약서상 IR활동 실시노력 준수조항 신설, 기업 설명회 등 참석시 제재벌점 감경(예: △0.5점 → △1점) 등
- ③ (IR 교육강화) ‘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’ 확대 시행(금감원), 공시 책임자 의무교육에 IR 과목 추가 등

② 기업공시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

- ① (기업)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증권시세표상 ‘공시우수법인’ 표기, 투자활용도가 높은 정보의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평가우대,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벌점부과 유예(코스닥) 등
- ② (담당자) 공시우수법인 담당자 포상 격상(금융위원장상) 및 교육면제,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도 일정요건 충족시 CPA 1차 시험 면제(유가증권 시장 既도입) 등

《기대효과》 투자기회를 적극 유치하는 기업 IR 및 자율공시 활성화

〈요 약〉

“충분하고 정확한 적시 공시”
(Full, Fair and Timely Disclosure)



[별첨]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참고자료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